### 다산포럼



김재인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세상에서 가장 착한 검둥이도 글을 알면 버릇이 없 어진다. 지금 저 검둥이에게 글을 가르치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당장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런 노예 는 주인에게 쓸모가 없다. 노예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만족을 못하니 불행해진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1818~ 1895)의 증언이다. 자고로 글은 권력이었고, 지배자는 노예에게 글을 금지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즉 '문 해력'은 일차적으로 권력의 문제였다.

왜 문해력을 길러야 하느냐고? 노예로 살지 않기 위 해서다. 자신이 노예로 사는지조차 모르는 일이 없어 야 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의탁하지 않기 위해서다. 문 해력은 사치의 영역이 아니다. 문해력은 기본권의 문 제이다. 본디 권리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흔히 '타 고난 권리' 운운하지만, 실제로 권리란 구성되는 것이 고 쟁취하는 것이다. 정당성으로부터 권리가 도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권리는 쟁취해야 존재한다. 권리를

## 문해력은 권력의 문제다

쟁취하는 수단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모두가 문해 력을 기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문해력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지니까.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지 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문해력 도 그러하다. 다만, 문해력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지적해야겠지만. 가령 아이들이 문해력을 기르는 훈련 과정을 싫어하고 거부할 수는 있다. 그렇 다고 해서 기성세대로서 그런 아이들을 오냐 오냐 받아 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나아가 아이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박탈해서도 안 된다. 교육이란 교사의 최선의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앞으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은 문해력 여부로 가름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은 증강 기술이고, 개개인의 역량을 증강하는 기술인데, 역량의 핵심은 문해력이

과거 읽고 쓰기는 인문학의 몫이었다. 자연어 능력 이 곧 문해력이던 시절, 인문학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 다. 이제 내가 말하는 '확장된 언어' 상황에서, 즉 자연 어에 보태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도 언어 가 된 현 시절에, 필요한 건 '확장된 문해력'이다. 이 점 에서 전통 인문학은 한참 뒤처져 있다(obsolete). 나 는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김재 인 저, 동아시아, 2023)에서 확장된 인문학을 내세우

문해력을 강조하는 것이 문해력이 모자란 사람을 겁 박하는 일로 비춰지면 안 된다. 오히려 문해력을 외면 하고 회피하려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이끌어 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문해력은 학교 성적도 시험 점 수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읽고 쓰기 위한 생각의 기 초 체력이다. 따라서 문해력의 강조는 엘리트주의와 상관없으며 기성세대가 모든 미래 세대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서비스의 중핵이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의 무이자 책임이다.

지금 기성세대는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가? 학교가, 입시가, 대학이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집 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해력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 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가? 공부하면 할수 록 무능력해지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 가?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이른바 '능력주의'는 철학적 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능력주의 를 비판한다고 해서 '능력' 자체를 비판하는 우를 범해 서는 안 된다. 능력, 또는 더 정확히 말해 역량은, 무언 가를 할 수 있는 힘이다. 역량에 따라 줄세우기를 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 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이들이 재미 없어 한다고? 피교 육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교사의 탓이라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社說

## 尹, 대국민담화…갈등 아닌 대화 계기 되길

의정(醫政)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 상태에선 대화에 나설수 없다며 증원 철회 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골자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도 의료계가 더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언 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의료계에 통일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은 오 랫동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한 안이 라며 의료계에서 증원에 반대하려면 확실 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 부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해 일부 조정 가 능성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의대 증원 2000명 원칙을 전제로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원 규 모 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읽힌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 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 함으로써 공을 의료계에 넘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숫자를 정해놓은

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공의 이탈이 7주째에 접어들었고 어제부터는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와 수술 축소에 들어간데다 일부 개원 의들은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동참하면 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고 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물웅덩이에 빠진 세살 아기가 병원을 찾지 못해 손도 써보 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의 대 증원 숫자에만 매몰돼 대화 자체를 거 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 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답 할 차례다. 창구를 일원화 하고 증원 규모 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 서다. 협상이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해법 을 찾을 수 있다.

### 법원장 심리, 고질적 재판 지연 해소 기대

광주 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 에 나서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 가 해소될지 관심을 모은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최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 행했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도 신설 재 판부인 민사 5부에서 항고심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 행정을 맡는 법원장들이 법복 을 다시 입은 이유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 기 위해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

겠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광주 지·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재 판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지 법의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경우 2020년 기소된 후 3년만인 지난 2월에야 1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 정감사 등에서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사법연감을 보면 광주 지법의 2022년 민사 1심 처리 기간은 186.1일로 평균 6개월이다. 문제는 민사 1심 처리 기간이 2020년 159.9일에서 2021년 173.4일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데 있다. 형사사건도 2020년 1심 처리기 간이 96.3일에서 2022년 117.7일(구속 기준)로 지연 추세다.

법원의 재판 지연은 법관은 한정돼 있 는데 재판부가 담당해야할 사건 수가 급 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신속 히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 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자 기본 책무다. 재판 장기화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 어뜨리고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도 침해 당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법 원장들이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인만큼 개혁차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접근하 는 게 필요하다. 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총체 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재판 지연을 최소 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 꿈꾸는 2040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총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기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들을 사이에 두고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 아들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표들을 심판해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든 비례후보든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 역시 그나마 선 거철에나 볼 수 있었지만 심판론에 가려 보이질 않는다.

4년 전 21대 총선도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 핵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다. 17대 총선은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의 바람이 불었고 투표율은 60.6%를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두 번을 제외하곤 역대 총선 투표율은 낮게는 40%대에서 50% 후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유권자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 은 '우리정치 참 쉽다'고 표현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쪽의 실수로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상대 정당을 악마화 하기만 하 면 된다. 인물도 정책도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내 지역구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은 어떤지는 중요치 않

## 선거 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

다. 이런 손쉬운 정치가 어디에 있는가. 역대 국회 임기 후 평가를 보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4년마다 반복 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판 박이처럼 각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내세 우기 보다는 정당에서 필요한 인물만 줄세우기 하듯 내 세우는 결과물들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최저 출산율과, 자살률, 노 인 빈곤율 등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년이 넘도 록 개선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총선 당시 인물과 정 책을 모두 등한시 한 결과물들이다. 이러니 투표율이 낮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 애써 시간을 내어 투표장으로 가고 싶겠는가. 누가 권력을 쥐든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정치적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로 이어지고 정치권은 이 를 이용해 지지자들만 함께 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선거 가 전락하고 있다.

속성상 권력은 끊임없이 더 큰 권력을 추구한다고 한 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 선거를 중심에 두 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이겨야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 고 총선에서 이겨야 차기 정권을 차지한다는 구호만 난 무한다. 언론 역시 이를 부추긴다. 선거 유·불리에 따 라 차기 정권의 향방을 점치고 정책 경쟁이 아닌 정당 내 헤게모니만을 다룬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가 무 섭게 차기 후보들을 내세우고 각종 여론조사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경마식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와도 지방의원, 단체장 등 모 두 중앙정치 눈치만 보고 있다. 지역에 맞는 정치, 행정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중앙정치에 종속 되어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차출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절반이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지방소멸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모두가 더 큰 권력만을 추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벽하거나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는 늘 변화하기 마련이다.

18세기 봉건시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영주와 성직자, 귀족 등 엘리트 집단의 정치를 끝낸 것처럼 이 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50%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인 선 거를 끝내야 한다. 자생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정 치권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위태롭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당장 1주일여 앞으로 다가 온 총선부터 내 지역의 후보가 누구이고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치 권이 무시한 인물 경쟁력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 신 있는 투표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 처럼 당장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 無等鼓 🕡

제주 4·3 76주년

제주의 4월 봄빛은 찬란하지만 한편으 이 새겨져있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 로 가슴을 아리게 한다. 몇 해 전 '다크 투 어리즘' 취재를 위해 제주 4·3유적지를 찾았을 때 가슴 아픈 풍경을 여러 곳에서 만났다.

우선 제주 4·3평화공원내 상징조형물 인모녀상 '비설(飛雪)'과조천읍 북촌 너 븐숭이 4·3기념관 앞 '애기무덤'은 가슴 을 먹먹하게 만든다. 모녀상은 1949년 1 월 6일, 토벌대를 피해 피신하던 중 봉개 동 거친오름 눈보라 속에서 희생된 25살

배기 딸의 실화를 바탕 으로 만든 작품이다. 북 촌리에서는 같은 해 1월

어머니(변병생)와두살

17일, 토벌대에 의해 남녀노소 400명 이 상이 한날한시에 희생됐다. 현기영 작가 의 중편소설 '순이삼촌' (1978년 발표)의 모티브가 됐던 집단학살 사건이다. 기념 관앞 무덤 20여기 가운데 8기 이상이 이 때 학살된 어린이 무덤이라고 한다. 무덤 가에는 과자와 인형이 놓여 있었다.

또한 제주 4·3평화공원에는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4·3 이후 대전과 호남, 영남지역 형무소로 이송된 뒤 행방불명된 제주도민 3913명의 이름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쟁이 발발하자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총살된 것으로 알 려졌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는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 비가 있 다. 132위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 어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명칭 을 붙이며 통한(痛恨)의 피눈물을 흘려 야 했던 유가족들의 심정이 오롯이 담겨

제주 4·3 사건이 76주년을 맞았다. 제

주 창천초등학교 학생들 은 최근 4·3을 기리는 현 수막 문구 '을큰허게(안 타깝게) 간 소중한 생

⟨FA 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5⟩

서 울 지 사 02-773-9331

명, 아름답고 또 뜻 헌 (따 뜻 한) 평화로 피 어나리'를 제주어로 제작해 정문에 게시 했다. 오늘 광주 광산구 광산문예회관 광 장에 제주 4·3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형물 '민중의 힘'(작가 강문석)이 세워진다. 육지에 설치되는 최초의 4·3조형물이다. 전국적으로 4·3을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마치 피어나는 동백꽃을 연상케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4·3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푸는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 야 할 것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 기 卫



오덕수 장성군 북하면 별내리마을 사무장

별을 보며 맥주를 만드는 산촌마을. 낭만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분명 낭만적이고 색다 른 이야기임은 분명하지만, 별과 맥주가 어떻게 전남 의 한 산촌마을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래 야 했는지를 말해볼까 한다. 필자는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한 산촌마을 사무장으로 11년째 귀촌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장성군 지정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면서 산림청에서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이다. 내장산국 립공원 내에 있는 터라 산과 숲과 계곡이 맑고 깨끗하 게 잘 보존돼 있다.

2013년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마을 사무 장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때 우리 체험센터 옥상에 작은 천문대 돔과 3대의 천 체망원경이 있었다. 마을 산 어귀에 돌무더기 터가 있 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첨성대 터'라고 불러왔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 당시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색있는 체험으로 첨성대 터에서 모티브를 따서 천문 체험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럴싸한 이야기와 아 이디어가 만나 지금의 우리 마을엔 산촌 천문대가 있고

# 별과 수제맥주로 꾸미는 산촌마을

밤하늘의 낭만과 과학이 접목된 천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문 또는 천체망원경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 온 필자가 업무 때문에 밤하늘을 배우고 천체망원경을 배우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것들은 밤에 이뤄져야 하는데 밝은 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만 찾아 가 배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다행 히 도와주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 하나하나 배워 나가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에 보이는 행성과 별자 리, 은하 등을 체험했지만 이후 별자리 컵 만들기, 별자 리 그림 그리기, 모형 망원경 만들기, 영상 수업 등 꾸 준히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접목하고자 노력했고 지금 까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체험을 완성했지만, 마을의 콘텐츠를 늘리고 자 또 다른 체험으로 완성된 것이 농촌 수제 맥주다. 농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은 대부분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나는 '왜 어른 체험은 없을까?'라는 의 문을 갖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맛본 농촌 수제 맥주 는 신세계 같았다. '이것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나니 강원도 홍천군까지 먼 길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숙 박을 해가며 배움의 즐거움에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 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몰트 (Malt·맥주원료가 되는 맥아)가 끓어 넘쳐 버리기도 하고, 어떤 공정에서 놓쳤는지 알 수 없는 실수로 다 만 든 맥주를 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나는 맥주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 에 지난해에는 맥주 2종 '별내리 페일에일'과 '별내리 스타우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보고를 통해 생산 자로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지 금은 마을 한 켠의 버려진 공간을 주민공동체와 함께 개조해 작게나마 양조 시설을 갖추고 농촌 수제 맥주 양조(釀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음객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무 맛있다고 할 때면 그동안의 수 고가 보람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시골에서 왜 그런 걸 하냐?"고 반문하고는 한다. 농촌도 단지 농·임산물 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농촌은 이 미 오래전부터 농촌의 정서를 담은 다양한 이야깃거리 와 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별을 보여준 다고 사람이 수천 명씩 몰려오지는 않는다. 맥주를 만 든다고 대기업과 경쟁해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없다. 하 지만 가치는 금전에만 담겨있지 않다. 도시보다 아름 다운 환경에서 더 풍성하고 사람다운 이야기가 풍부한 곳이 농촌이고 산촌이다.

체험 프로그램 몇 가지 운영한다고 마을과 주민 소 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거창한 목표는 없다. 단지 멀 지 않은 곳에서 도시민과 만나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 러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와 역할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힘든 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 자부한다. 따사로운 봄날 유명 관광지 대신 너 른 마음으로 늘 반기는 농촌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5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3 ⟨FAX 222-0195⟩

> ※구독료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디 자 인 실 220-0536